

민간경상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 4. 26. ~ 5. 14.까지 (14일간) 2019년 문화관광, 환경보호분야의 민간경상분야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였다.
- 감사결과 총 23건(본처분 13건, 현지처분 1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총괄현황			처분현황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주의	시정	개선·권고	통보	계	추징·회수	환급·감액	훈계	
23	13	10	23	18	4	-	1	4/39,307	4/39,307	-	1	

□ 지적사항: 불임

인 천 광 역 시

주 의 · 시 정 요 구

제 목 ○○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자본적 경비로 집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1조(교부신청) 및 제42조(교부결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별표 12]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사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자본적 경비 사업에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치단체장은 관련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의 환경 개선(구조물 설치)을 위한 예산변경 신청에 대하여 예산변경 요청을 원안승인하였고, 자동차 구입 계획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성 물품을 구입하였다.

2. 계약절차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지방계약 법령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미실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추진 시 지출되는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및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라목에 의하면 행사 운영요원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¹⁾ 대상이다.

그러나 ○○과에서는 행사 운영요원 수당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자본적 경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교부결정 검토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자들이 지방계약법령 및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미징수된 소득세 504,24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 * 연도별 기타소득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세율

구 분	2018.3.31.까지	2018.4.1.~2018.12.31.	2019.1.1.부터
필요경비율	80%	70%	60%
원천징수비율(지방소득세포함)	4.4%	6.6%	8.8%
과세최저한	250,000원 이하	166,666원 이하	125,000원 이하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자부담 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1조(교부신청) 및 제42조(교부결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자기부담능력 유무를 조사·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보조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의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른 정산 및 반환조치 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시정)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 정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부담 정산 중 기 반납한 금액을 제외한 8,429,66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시정 요구·통보

제 목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1. 보조사업의 계약(채위탁)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별표 12]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채위탁이 불가하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보조사업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A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없이 2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지출한 지출증빙이 아닌 계약상대업체들이 지출한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결국 보조사업자의 계약상대업체 선정은 ①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으로 볼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며, ②보조사업의 위탁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위탁임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 결과를 확정하였다.

2.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출사유 및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또는 지출품의서) 없이 신용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만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각 지출 건의 지출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지출인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지출의 경우 산출기초(구입목록) 등의 확인이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추가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 없이 정산 결과를 확정하였다.

3.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미사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출증빙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가 아닌 여러 장의 다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후 계좌이체하였다.

4.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2.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검토 소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지출증빙(신용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명시된 사업비 집행액과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총액이 서로 다르고, 두 금액의 차액에 대한 지출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조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 다. 사유의 부적정한 지출이 확인되었다.

가. 교부결정 통지 이전 지출 및 타 행사 사업비 청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4조(교부결정통지) 제2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였다.

나. 부적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보조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 10건, 48,620,000원 중 9건, 47,5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고,

이에 전자세금계산서 월별목록을 확인한 결과, 9건이 모두 수정발급(합계 22,342,800원) 되었으며, 그 차액은 25,177,2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지출증빙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

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참가자 간식 구입과 운송비를 지출하면서 일반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등의 내역이 없어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정산검수 지출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 뿐 성과물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내용의 정산검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행사) 장소와는 관련이 없는 서울시 ○○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서, 서울시 ○○구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5. 보조금의 자부담 정산 미실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6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1조(교부신청) 및 제42조(교부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자기부담능력 유무를 조사·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른 정산 및 반환조치 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①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 및 보조사업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실적보고서 검토 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처분 합니다.

(관련자) 인천광역시 지방○○○○ ○○○

(시정) 부적정 집행 및 자부담 정산을 반영한 30,374,870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속히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부적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보조사업자 및 이를 공모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 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 사용 및 운영비(인건비) 사용에 대한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44조(교부결정통지) 제2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¹⁾로 교부할 수 없으며, 다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조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1)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들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료비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사용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치단체장은 인건비가 보조사업 기간 동안 직접 필요한 인건비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행정급여(사업담당 ◇◇◇) 명목으로 교부결정통지(2019. 2. 8.) 전 근무한 직원의 1월 인건비를 지출(2019.3.18.)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이 2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여 진행된 사업이 아님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자의 행정급여 지출은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로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2.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정산서류 미흡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10개 기관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신청서만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사업종료 후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실적보고서 등 별도의 정산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더욱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중 일부인 2백만원을 자기 단체에 재교부 하였다.

따라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3.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 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용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집행 기준을 이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① 타 기관 카드로 결제 후 그 금액을 해당기관으로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재결제하였으며, ② 세금계산서 첨부 후 계좌이체 한 것으로 실적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에 대해 지적 없이 보조금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거나 보조사업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시고, 보조금 정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의 자본적경비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6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1조(교부신청) 및 제42조(교부결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별표 12]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자본적 경비 사업에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치단체장은 관련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과는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시설 LED 조명 교체, 건축물 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설분야 지원 사업유형으로 제시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예산을 공사비로 집행하도록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에 소홀함이 있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자본적 경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교부결정 검토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과목 부적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¹⁾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고, 필요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307-03목)’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경비(임대료, 공공요금, 사무잡비 등) 및 사업·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1) 운영비: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 등이 이에 해당됨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용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 집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과에서는 2019년 4월 18일 보조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A단체는 2019년 1월부터 3월 까지 시설운영비(전기료) 등 10건 299,290원, B단체는 임차료 등 11건 744,380원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하였고, C단체는 2월에 사용한 예산을 5월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3건 85,840원을 집행하였다.

3.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지출 증빙 미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¹⁾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정산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복사용지구입 등 총 42건을 계좌이체하고 견적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납품사진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집행을 하였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시 계획에 의거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 등 증빙 서류 일체 없이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단체운영 명목으로 부식품 구입 등 적절치 못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기관 의견

○○과에서는 사업 담당자의 휴직으로 대직자가 2018년도 사업분 정산을 실시, 2019년 3월 1일자로 발령 난 후임자가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하게 되어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매달 일정시기에 지출될 수밖에 없는 임대료, 공공요금 등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교부 전 집행이 되어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실시 시 모두 “주의” 조치하여 단체별 통보한 사항으로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 (주의) ①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시에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예산과목을 기준에 맞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시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증빙자료 첨부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 시 정 요 구

제 목 원천징수 부적정 및 집행 증빙 등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1.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에 의하면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강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강사료, 출연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6조(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당초 교부 결정된 사업계획에서 사업내용의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강사료 일부를 간식비로 지출하였다.

3. 지출 증빙 소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8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및 전시사업 등 실적보고서 제출 시 출연(참여)확인서류(자필서명 등), 입금확인증(이체증명서) 등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지 않았다.

관련기관 의견

○○과에서는 2019년 정산검사 시 원천징수 미이행 보조사업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2021년부터 보조금 사용 안내자료 등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로 고령인 보조사업자의 인식 개선이 더디고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 (주의) ①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준수하고,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기준과 준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아울러 사업담당자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 미징수된 인건비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금 재위탁 및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1. 지방보조금 재위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다.

그러나 ○○과에서는 보조사업자로 A를 선정하였는데도 A는 B에게 보조사업을 재위탁하여 추진하였다.

2. 지방보조금 계약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¹⁾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1)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① **선금 지급**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의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지만,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할 경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②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입찰 등을 통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48조(실적보고), 제49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방계약법령」을 미 준수 하는 등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정산 결과를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입찰기준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사업담당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③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산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8조(실적보고) 및 제49조(정산검사)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A단체 사업비 지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체크카드 미사용, 지출증빙 서류 미첨부 등 집행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으나, 현지 방문 점검 결과 시 보조금 관리가 적정하다고 결과 보고하고, 정산 검사로 갈음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집행잔액 금액조차 확인하지 않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를 하였다.

B단체 지원 담당자 역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지출증빙 서류 미첨부, 일반 법인카드 사용 후 이체 등의 부적정한 집행에도 적정 운영 정산 보고를 한 후 정산 검사로 갈음하였다.

또한 C사업도 자부담 계획 예산을 보조금으로 선지출 하고 자부담 보전하는 등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자에

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보조금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